

광역시 99% 상수도 보급률 면단위 45%

도농간 격차 여전.. 수도요금은 m³당 광주 512원·전남 960원

대도시의 수돗물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는 반면 면 단위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상수도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공공 하수도는 사용료가 실제 설비·운영비의 절반도 안돼 국가 및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환경부가 발표한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97.9%였지만

전남도는 6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특별·광역시는 99.1%, 도시 97.6%, 읍 86.2%, 면 45.2%로 농어촌의 수돗물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전국 평균 수도요금(m³당 603.9원)은 생산원가(715원)의 84.4%로, 전년 현실화율(요금/생산원가) 82%보다 다소 올랐다. 시·도별 m³당 수도요금은 광주가 511.7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전남은 960.3원으로 상대적

으로 높았다.

환경부는 지역별 수도요금 차이에 대해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수도의 경우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87.1%로 국민 4천357만 명에게 하수처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역별 보급률은 광주시가 98.0%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광주는 92.0%, 전남은 39.6%로 나타났다. /총행기자 redplane@

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수처리 비용은 2조8천57억 원(t당 571원)이었으나 사용료로 거둔 금액은 1조2천897억 원으로, 현실화율이 44.5%에 그쳐 국가·지방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도별 t당 평균 하수도요금은 광주(344원)와 충북(340원), 부산(316원)이 비교적 높았고 전남(142원), 경남(167원), 강원(188원) 등은 낮았다. 현실화율은 인천이 114.6%를 기록했으며, 광주는 92.0%, 전남은 39.6%로 나타났다. /총행기자 redplane@

불법식·의약품 장난감 등 7대 품목

국내 반입 즉각 차단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 지나간 가운데 식품·의약품·장난감 등 국내 소비 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의거 앙도, 원산지에 대한 판별과 함께 가짜상품 판매 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관련기사 5면〉

이들 품목 중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이후에도 리콜(보세구역 재반입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했다. 이를 7개 품목과 관련해 관세청은 ▲사전 예방(Prevention) ▲단속 강화(Intervention) ▲신속 대응(Response) 등 3대 핵심전략 단계별로 20개 세부 추진책을 세웠다.

사전예방과 관련해 관세청은 수입 업자뿐 아니라 해외 제조사·관세사·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법규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시 전국 47

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보관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식품·의약품·의류·주방용품·화장품·

신변장식용품·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건강·증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했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들이 합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물품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한전안전부는 23일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